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2018. 1.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조정실

순서

I. 평가 개요	1
II. 부문별 평가결과	5
1. 국정과제 평가	7
2. 일자리 창출 평가	31
3. 규제개혁 평가	42
4. 정책소통 평가	48
5. 국민만족도 평가	55
6. 기관공동사항 평가	60
(1) 현안관리	60
(2) 갈등관리	65
(3) 인권개선	70
(4) 특정시책	76
III. 기관별 종합 평가	83
IV. 후속조치 계획	87

I. 평가 개요

I. 2017년 평가 개요

① 평가대상

- 기 관 : 43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
- 기 간 : '17.5.10 ~ 12.31

② 평가부문

- ◇ 새 정부 출범 첫 해 국정과제와 일자리 창출 노력에 최우선 비중
- ◇ 국민과의 정책소통, 국민들의 국정평가(국민만족도)도 중점 평가
- ◇ 현안관리·인권개선·갈등관리 등은 가감점 반영

- ① (국정과제) 국정과제 및 기관별 핵심업무 평가를 통해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
- ②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 평가를 통해 공공·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
- ③ (규제개혁) 규제개혁 노력 및 성과 평가를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 ④ (정책소통)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소통 노력 및 성과 평가를 통해 국민의 정책성과 이해 및 체감 확산
- ⑤ (국민만족도) 국정과제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통해 국민체감 성과 제고
- ⑥ (기관공통사항) 현안관리·갈등관리·인권개선·특정시책 이행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여 주요시책에 대한 정부 추진노력 견인

< '16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2016년 평가	2017년 평가
① 국정과제 50 · 핵심개혁과제(과제별 최대 ±2) · 협업(기관별 최대 ±1)	① 국정과제 50 · 혁신관리 및 협업(기관별 최대 ±2)
② 규제개혁 20	② 일자리 창출 20
③ 정책홍보 20	③ 규제개혁 10
④ 정상화과제 10	④ 정책소통 10
⑤ 기관공통사항 ±10 (정부3.0 ±5, 성과관리 ±3, 특정시책 ±2)	⑤ 국민만족도 10
	⑥ 기관공통사항 ±10 (현안관리 ±3, 갈등관리 ±3, 인권개선 ±2, 특정시책 ±2)

3] 평가방법

- 정량평가(부문별 주관기관)와 정성평가(민간평가지원단)를 병행하여 평가의 객관성·전문성·공정성 제고
 - 부문별 주관기관은 추진계획 이행정도, 성과지표 달성도 등에 대해 정량평가
 - 부문별 평가지원단은 국정과제 관련 위원·전문가·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 질적인 측면에서의 정책효과를 정성평가
- 평가부문별 기관점수를 합산하여 기관종합 평가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 심의·의결

4] 평가결과 제시

- 평가결과는 장관급과 차관급 기관으로 구분하여 기관별 등급 부여 (우수, 보통, 미흡)
-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보완사항 제시

Ⅱ. 부문별 평가결과

1. 국정과제 평가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100대 국정과제 전반을 객관적·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뒷받침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직제순)

구분	기 관 명
장관급 (23개)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차관급 (20개)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 평가방법

- 정부업무평가위원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평가지원단」 구성(437명)
 - 분야별 민간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 참여, 10개 분과로 구성
- 분과별로 평가지표에 따라 정량·정성평가 병행 실시
- 주관 국정과제가 1개 이하인 기관(21개)은 국정과제 관련 주요정책을 선정(37개 과제), 국정과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

□ **평가지표(50점)**

- 정책추진 노력(40%), 성과지표달성도(30%), 정책효과(30%)를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책추진 노력	· 과제 추진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했는지 여부
성과지표 달성도	· 사전에 제시된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정책효과	· 성과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정책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

2 평가 등급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순으로 표기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 특허청, 새만금개발청
보통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미흡	통일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3 총 평

□ 대내외 정책 추진 여건

- 저성장·경제적 불확실성 심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환경 변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 시장주의 확산·공공성 약화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확대,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지속
- 북 핵·미사일 도발 및 사드배치에 따른 주변국과의 갈등 등으로 한반도·동북아 긴장 고조

⇒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 국정 조기 안정화와 새로운 국가정책방향 정립이라는 이중적 요구에 직면

□ 중점 추진사항 및 주요 성과

-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과 성과창출을 위한 정책추진 기반 구축
 - 국정과제 추진체계 구축, 일자리·경제·복지 등 분야별 정책 로드맵 발표 등 100대 과제별 추진기반 확립
- 적폐청산, 반부패 개혁 추진 및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국정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 적폐청산을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 반부패정책협의회 등 범정부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권력기관 개혁 논의 본격화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참여형 정책결정 모델 제시
- '사람중심 경제' 구현을 위해 정책기조를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으로 전환
 - 일자리 추경,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등 일자리중심 정책 추진, 최저임금 인상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일자리 질 개선
 -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등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가맹·하도급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추진

-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복지·교육·보육·안전·환경 등 국가 책임성·공공성 강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포용적 복지체계 구축
 - 서민·청년 주거지원 확대, 교육·보육환경 개선 등 인구절벽 해소와 민생안정 및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역할 강화
- 4대 지방자치권 보장 등을 통한 강력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 자치분권 로드맵(안) 등 분권형 국가 이행전략 수립,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 균형발전·성장기반 마련
-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반 구축 및 주변 4국과의 관계 복원
 -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
 - 정상외교를 통한 주변 4국과의 관계 복원 및 신북방정책·신남방정책 등 외교관계 다변화·다원화

□ 미흡한 점

- 공수처 설치, 과거사문제 해결, 부패방지 추진기반 강화 등 개혁 과제 이행을 위한 주요입법 일부 지연
- 국민소득, 경제성장률 등 거시 경제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 내수·고용 시장에서의 체감경기 회복은 부진
- 산업재해, 화재·해상사고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사고예방·현장대응체계 및 생활 속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 현실화에 따라 한반도 안보 불안정성 지속

▶ '18년에는 개혁과제 이행 완수 및 민생과제 본격 추진으로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에 주력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 ◇ 적폐청산, 반부패 개혁, 권력기관 개혁 등 개혁과제 추진을 통해 정부 신뢰 회복 및 국정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 ◇ 공수처 설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반부패 총괄기구 기능 보장, 과거사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주요 입법 일부 지연

주요 정책성과

□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 추진

-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 부처별 적폐청산TF 활동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등을 통한 정부 신뢰 회복 노력
 -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
-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출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 반부패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 공익신고 대상 확대(건강·안전·환경 등 5대 분야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3개월→1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 과거사 진실규명 및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한 국민화합의 기반 마련
 - *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일제강제동원 희생자·유족 및 제주 4.3 유족 간담회,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 개최 등
-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등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 노력 지속
 - * 방송·미디어·법률·경영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9인으로 구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정부 혁신으로 국민통합의 전기 마련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회혁신 민관협의회* 발족, 국민참여예산 도입 등 국민참여 및 소통 확대

* 사회혁신과 관련한 민관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사항 발굴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 공무수행중 사망한 비정규직 순직 인정 방안 마련 등 공직 내 차별 해소 등을 통한 사회통합 촉진

* 독립유공자 후손(손·자녀) 신규지원,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등 지원범위 확대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 노력 지속

* 블라인드 채용 전면 도입, 공공기관 경영평가지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등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추진

- (검찰) 공수처 신설 논의를 본격화하고, 인권감독관 신설, 변론기일제 시범실시, 무죄사건 판결확정 전 평정제도 도입 등 내부 통제 강화

- (경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및 경찰권 행사 기본원칙 발표(경찰개혁위) 등 공권력 남용에 대한 통제 강화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대외안보정보원 명칭변경 등 조직쇄신안 마련

※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주요 권력기관 개혁 방향 발표('18.1.14)

□ 인권존중사회 구현 노력

- 별건조사 금지, 반인권적 범죄피해자 국가배상 소멸시효 배제 등 인권정책 개선방향 제시(법무·검찰개혁위)

- 경찰 관련 인권위 권고 불수용 사안에 대한 전향적 수용* 결정,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및 영상녹화 확대 등 수사과정 인권 보호 강화 추진

* 장비(물대포·차벽)사용 자제권고 등 '01~'16년까지 불수용 108건 중 86건

- 인권개선 노력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인권위 권고에 대한 회신 의무 준수율·수용률 향상* 등 기관 차원의 관심도 제고

* 9개 기관의 36개 권고 이행계획 회신율·수용률 100%(7~12월)

문 제 점

□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의 가시적 성과 부족

- 법무·검찰개혁위, 경찰개혁위를 통해 각종 권고안이 발표되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제정** 등 실질적 제도 개선 추진 지연

*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수사구조개혁’ 권고안을 발표(12월)하였으나, 검·경간 논의는 아직 본격화 되지 않은 상황

** 공수처 설치의 경우 신설 필요성, 권한·범위 등에 대해 이견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확산의 경우 경찰개혁위원회 검토·논의 기한 연장 등으로 「자치경찰법」 제정안 마련 지연

□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 기반 마련 지연 및 공감 형성 부족

- 광주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위 설치 및 진실화해위 활동 재개 등을 위한 「5.18 특별법」, 「과거사정리기본법」 제·개정 지연*

* 제·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진실화해위원회의 업무범위, 진실규명 범위 등 이견으로 처리 지연

- 제주 4.3사건에 대한 국민 인지도·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저조*

* 사건별 인지도 : 5·18 광주민주화운동(99%), 노근리 사건(75.7%), 4·3 사건(68.1%)
(제주 4.3 평화재단 조사결과, 11월)

□ 부패방지 관련 일부 과제 지연 및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신뢰 저하

- 권익위 혁신방안은 발표(12월) 하였으나, 반부패 총괄기구로서의 기능 보장*을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마련 등 지연

* 부패신고 시 피신고자에 대한 권익위의 조사기능 보완, 국민감사 청구대상 확대 등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

- 사회 유력인사들의 부정청탁에 의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의 채용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개선·보완 방향

- ◇ 적폐청산과 개혁과제 추진 성과 가시화를 위해 부처간 협업 및 대국회 협력 강화
- ◇ 권력형 비리 예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척결 등 반부패 개혁 확산으로 정부 신뢰도 제고

□ 적폐 청산 및 권력기관 개혁 지속 추진, 제도개선 성과 도출

- 적폐청산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확보하고 제도개선 성과 제시

* 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규모가 큰 불법을 바로 잡고,
②국민불편·손해를 초래하거나, 미래발전의 잠재력을 잠식하는 정책·제도·관행 개선

- 검·경 개혁 등 주요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필요한 입법 조치 등을 신속히 이행

□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 및 국민 공감대 확산 노력

- 「5.18 특별법」, 「과거사정리기본법」 등 국회 통과 노력을 강화하고 법 통과 즉시 후속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철저

* 5.18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과거사통합재단 설립 준비 등

- 제주 4.3사건 70주년을 계기로 화해와 상생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원 강화

□ 범국가적 반부패개혁 노력 강화로 국가청렴도 제고

-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 기능 보강, 공수처 설치 등 관련 입법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반부패 개혁 추진체계 확립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집중관리를 통해 채용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2) 더불어 잘사는 경제

- ◇ 일자리·소득 주도,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통한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정책 방향 전환 노력
- ◇ 가계 부채 등 민생불안 요인 지속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구체적 성과 부족

주요 정책성과

□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체계 구축

- 일자리 위원회 설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마련 등 범정부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 마련

*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일자리 추경, 공공부문 일자리 로드맵*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고용주 역할 선도

* 현장민생공무원 17.4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명 등 '22년까지 81만개 일자리 창출

□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및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추진

- 법정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 대부업법: ('16.3) 27.9% → ('18.2) 24%, 이자제한법: ('14.7) 25% → ('18.2) 24%

- 서민·중산층·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교통·통신비 부담 경감**

* 근로장려금 인상(77~230→85~250만원),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10%→12%)

** 광역버스 노선 증설(5개), 저소득층 휴대폰 기본요금 인하(11천원) 등

-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 영세가맹점 범위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추진

□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추진

- 가맹·유통·하도급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및 중소기업 기술 유용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전속거래 강요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활성화,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 확대 등

-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대상 확대(자산총액 5조 이상) 등 대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 노력

□ 4차 산업혁명 대응체계 구축 및 에너지 전환정책 본격화

-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마련, 기초 연구 예산 대폭 확대* 추진 등 미래 대응 노력 강화

* 연구자중심 기초연구 예산 : ('16) 1.1조원, ('17) 1.26조원 → ('22) 2.52조원

- 단계적 원전 감축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정책 전환

* 재생에너지 3020계획 :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16) 6.95% → '30년까지 20%이상

□ 중소기업 지원체계 정비 및 창업·벤처기업 성장 기반 강화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중소기업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각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15개)을 중기부로 이관

-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 확대* 등 창업·벤처기업 성장 지원

*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평가 우수기업 등 → 7년 미만 기업), '18.3월 전면폐지

□ 수출·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 실현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출실적 달성

* 수출실적 : ('16) 4,954억 달러 → ('17) 5,739억 달러, 전년대비 15.8% 증가

- 추경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3%대의 안정적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 3만불 진입 가시화

* 경제성장률 : ('16) 2.8% → ('17) 3.1%

문 제 점

□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지연

- 영세상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시기가 '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래

* 적합업종 권고 만료품목(73개) : ('18) 47, ('19) 17, ('20) 2, ('21) 4, ('22~'23) 3

- 서민 생계업종 및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안* 제·개정 지연

* 「생계형적합업종지정에관한법률」, 「상권내몰림방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 가계부채 관련 민생 불안요인 지속

-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시중금리 인상 본격화시 서민 가계부담 증가 우려

* 가계부채(조원) : ('15) 1,203 → ('16) 1,343 → ('17.9월말) 1,419

** '17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전년 동기대비) : 서울 4.7%, 경기 1.7%, 인천 1.5%

□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품목 경쟁력 및 R&D 사업화 미흡

- 차세대 디스플레이·리튬 2차 전지 외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품목의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조

* 세계시장 점유율('16) : 차세대 디스플레이(19.5%), 리튬 2차전지(12.6%) 외 지능형로봇·항공우주산업·첨단의료기기 등은 5% 미만

- R&D 사업 기술개발 성공률은 높은 수준이나 사업화 성공률은 대체로 낮은 수준

□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의 체감 성과 부족

-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적극적 규제혁신 노력에도 입법 등 제도화 미흡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현장 체감도는 낮은 상황

* 개인정보 보호 규제, 기존 이해집단의 반발 등으로 빅데이터·IC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시장 출시 애로

개선·보완 방향

◇ 서민 생계업종 보호 및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등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노력 지속 추진

◇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핵심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지원 및 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통해 혁신성장 기반 강화

□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상가임차권 보호, 복합쇼핑몰 규제 등 소상공인 보호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법안 조기입법 추진

□ 가계부채 리스크에 철저 대비

- 新 DTI, DSR의 차질 없는 시행 및 지속적인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
- 중·저신용자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방식 개선 및 중금리 대출 확대

□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응 강화

- 에너지 신산업 등 핵심 선도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노력 및 우수 기술인력 양성, 창업 활성화 지원 등 혁신인프라 강화
- 수요 기반형 R&D 지원 확대 및 사업화에 따른 리스크 경감방안 마련 등을 통해 R&D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 규제 샌드박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드론, 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 분야에서의 혁신적 기업 활동 촉진
- 시장 기득권층의 저항 문제와 관련, 국민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소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포용적 복지국가 기반 조성
- ◇ 저출산 위기 심화, 대형인명사고 발생, 먹거리 불안 등으로 일부 국민생활 밀접과제 체감도 저하

주요 정책성과

-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전 생애에 걸친 사회보장 강화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노인·중증 장애인 등 기초생활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보호 강화
 - *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17.11), 주거급여('18)
 - 아동수당 도입('18.9월) 방안 마련,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17년 11.3만명),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로 '잘 키우고, 잘 모시는' 행복복지 실현
 - * 기초연금 수급자 수 : '16년 458.1만명 → '17년 486만명(6.1% 증가)
-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및 '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70% 수준으로 확대
 - 시군구별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1:1 맞춤형 관리, 중증치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까지 인하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
- 집값 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서민 주거안정 강화
 - 다주택자 규제·단기투기 수요 억제 등 집값 급등에 대한 정책대응(8.2),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기반 마련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과 고령자·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 (청년) 세어형 임대주택, (신혼부부) 특화형 임대주택 20만호, (고령자) 복지 서비스 연계 임대주택 5만호 등

□ 노동시장 차별 해소를 위한 여건 조성

- 비정규직 감축 로드맵 마련,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격차 해소 추진, 노사자율원칙에 따른 인사·보수체계 보장* 등 노동기본권 신장

* 2대 지침(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지침) 및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 폐기

- 장관급 여성 비율 역대 최초로 30% 달성, 군 최초 여성 장군 3명 동시 진급(12월) 등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확대

□ 전 국민이 함께하는 동계올림픽 준비

- 경강선 KTX 개통, 숙박 요금 안정화*, 관광 연계** 등으로 모든 국민이 부담 없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준비

* 숙박예약 콜센터(1330번)운영, '올림픽착한숙박업소' 인터넷 홍보, 지도점검 등

** 시티투어, 축제(평창송어축제, 대관령눈꽃축제 등), K-FOOD PLAZA운영 등

□ 교육의 공적책무성 강화 및 민주성 회복

- 모든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저소득층 대상 유치원·대학 입학기회 확대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

-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 및 사학비리 근절제도 확충**,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등으로 교육현장의 민주성 회복

* 총장 간선제-재정지원사업 연계 폐지 등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개선방안 발표

** 사학혁신추진단 구성·운영, 국민제안센터 운영, 회계감리 강화 등

□ 재난·안전 대응체제 구축 및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노력

- 소방·해경청 독립, 소방인력·장비 확충 등 재난대응체제 개편 및 안전약자별 맞춤형 대책* 등을 통해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체제 강화

* 장애인 안전관리 종합대책(9월), 보행안전 종합대책(9월), 외국인·다문화가족 안전관리 대책(12월) 등

- 포항 지진피해지역의 신속한 재건을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

-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종합대책 발표, 예방중심 방역체계로의 전환 및 초동조치 강화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에 총력 대응

문 제 점

- 그간의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 부족, 저출산 문제 지속 심화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17년 출생아수 역대 최저* 등 인구절벽 위기 심화
 - * '17년 36만명대 예상('16년 40.6만명 대비 11%대 감소)

- 사고예방·현장대응체계 및 생활 속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 화재·낙상사고 현장대응 미흡 등으로 인명피해 확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대책 발표* 후에도 유사사고 지속 재발
 - * 관계부처 합동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8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예방대책(11월)
 - 살충제 계란 사태·생리대 유해성 논란 등에 대한 대응 미흡으로 먹거리 및 인체접촉제품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 불안 가중

- 감염사고 등으로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신뢰 저하
 - 중증질환 의료전문기관인 이대목동병원에서 감염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사고 발생 등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불안 초래
 - 권역외상센터의 고정비용 과다로 제대로 운영하기 힘든 구조이며, 이송체계 미비로 환자발생 시 센터 이송률 저조(6.7%)

- 교육·사회현안 관련 현장소통 및 부처간 협업 부족
 - 일부 교육현안 과제 추진 과정에서 정책수요자, 관계부처와의 소통·협업 부족으로 정책 발표 후 번복되거나 혼선·갈등 야기*
 - * 수능 개편 1년 유예, 누리과정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철회,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입시 동시 실시 관련 갈등 등
 - 학교 밖 위기 청소년에 대한 관계부처간 정보 연계 부족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 발생,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 사회문제로 확산

개선·보완 방향

-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강화 및 각종 재난·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
- ◇ 대입제도 개편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대국민 소통과 부처간 협업 강화를 통해 혼선·갈등 예방

□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 개편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중심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 재구조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정책 실효성 제고
- * 부위원장 신설, 위촉직위원 확대(10명→17명), 위원회 직속 사무처 신설 등

□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대책 마련

- 재난 유형별·현장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수립 및 부실점검 근절 등 현장에서의 안전대책 준수를 위한 강력한 이행수단 마련
- 축산업 선진화, 인증제도 개선 등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등을 통한 농축수산물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

□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 의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감염 감시대응체계 강화, 의료기관 평가 제도 개선, 인력·시설기준 개선 등 종합대책 수립
- 환자 이송체계 개선, 지원 확대 등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 수립*을 통해 국민들이 외상으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의료체계 구축
- * 외상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확대, 소방헬기 등 연계 운영, 수가체계 개선 등

□ 교육·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부처간 협업 및 현장 소통 강화

- 주요 교육현안 관련 부처간 협력 및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 충분한 소통을 통한 합의 도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제도 전반을 재점검, 관계 부처간 정보 및 정책연계 확대 등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 재생뉴딜 등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성장 기반 강화
- ◇ 지방분권 강화 등 논의를 주도할 추진체계 확립이 일부 지연되었고, 행복도시·혁신도시 등의 지역성장 거점 기능은 아직 부족한 상황

주요 정책성과

- 중앙정부 권한 지방이양, 지방재정 자립을 통한 자치분권 추진
 -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간담회를 통해 중앙-지방간 수평적 국정운영 파트너십 구축,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통한 자치분권의 청사진 제시
 - * △중앙권한 지방이양 △재정분권 △자치역량 제고 등 5대 전략·30개 핵심과제 선정
 - 지방재정제도 개선 방안*, 재정분권 기본방향** 발표 및 범정부 재정분권 TF 구성·운영 등 재정분권 논의 본격화
 - * 지방의회·지자체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 중앙 투자심사 대상 사업범위 완화 등
 - ** 국세·지방세 비율(현행 8:2)을 7:3을 거쳐 6:4로 개편,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 지자체 행정·재정운용 자율성 및 주민참여 확대
 -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자체 조직 자율성 확대 방안* 마련
 - * 지자체별 자율적 정원관리 및 모든 지자체 과(課) 단위 이하 기구설치 자율화 등
 - 지자체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범위 완화 등 지방재정제도 개선
 - 온라인 주민조례개폐청구 시스템 구축 등* 주민 참여 민주주의 확대 기반 마련
 - * 주민 조례개폐청구시 현장서명 외에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참여

□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성장기반 마련

-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22년까지 30%) 등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 도시재생뉴딜 추진방안 발표 및 시범사업 대상 선정(68개소) 등 지역공동체 주도의 도시재생* 추진
 - * 기존의 대규모 철거·정비 사업에서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환경 개선으로 도시재생 패러다임 전환(노후 주거지 정비, 구도심 활력 거점 조성 등)
- 행안부·과기정통부 추가이전 결정*,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건설 및 공공성 강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보강
 - * 「행복도시법」 개정 및 '18년 청사 신축 소요예산 반영
 - ** 사업방식 전환(민자→도공), 사업기간 1년 6개월 단축('24.6월 개통) 및 통행료 부담 경감
-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산단, 대학 등 기존 인프라를 연계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추진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 등 한국 해운 재건 프로그램* 추진 및 항만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핵심 산업 재건 지원
 - * 해운 전담 지원기관(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한국해운연합 결성·운영 등
 - ** 해양산업클러스터(부산항, 광양항) 지정, 노후항만 재개발('17년 465만m²) 등

□ 지속가능한 농산어촌을 위한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 노력 지속

- 선제적 농산물 수급 안정대책* 추진, 재해보험제도 개선 및 직불금 단가인상** 등 농어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 *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마련(9월), 수확기 쌀 가격 전년 대비 19.7% 상승
 - ** 받고정: ('12~'16)40 → ('17)45만원/ha, 수산: ('16)50 → ('17)55만원/ha 등
- 100원 택시 등 교통취약지역의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 이동권 보장 등 농산어촌 생활여건 개선
 - * 농촌형 교통모델사업(100원 택시 등) '18년부터 82개 전체 군 지역으로 확대
-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결정, 공공주도 매립 전환 및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 추진 등 새만금 사업 가속화 기반 마련

문 제 점

-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 마련 지연
 - 중앙-지방간 협력, 입법·행정·재정·복지 분야별 추진방안 등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구성 지연
 -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공식 출범('18.1.23)

- 예산에 대한 주민 통제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미흡
 - 지자체 **주민참여예산 반영비율** 저조, 일부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미구성*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관심 부족**
 - * 총 243개 지자체 중 44개 미구성(18%)

- **행복도시 자족기능 부족** 및 **혁신도시의 지역성장거점 기능** 미흡
 - 대부분의 정부기관 이전 완료 등 세종시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으나, 기업 유치를 통한 민간 일자리 마련 등 **도시 자족기능 확충 미흡**
 - **혁신도시 기반 조성은 마무리 단계***이나,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역 특화 발전 등 **균형발전 거점으로서의 실질적 역할 부족**
 - * 이전대상 공공기관 153개 기관 중 147개(96.1%, 4만9천명) 기관 이전 완료

- **지역산업발전의 핵심거점인 산업단지 활력** 저하
 - 기반시설 노후화, 문화·복지·편의시설 부족, 우수 인재의 산단 내 취업 기피 등으로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저하**
 - * 착공후 20년이 지난 국가·일반 산업단지 : ('17) 144개소 → ('22) 172개소

-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시행에 따른 부동산 시장 과열** 등 부작용 우려
 - 투기 수요로 인한 주택 매매 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과열** 및 임대료 상승에 따른 지역 영세상인과 주민의 내몰림 현상 발생 우려

개선·보완 방향

- ◇ 재정분권 등 자치단체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확정,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진전 계기 마련
- ◇ 혁신도시 등이 실질적인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별 혁신성장 선도기반 확충 등 도약의 기반 강화

□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기 확립

- 자치분권 로드맵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조속히 확정, 지방분권형 개헌방향 제시 및 제도화 기반 마련
-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기반이 되는 '자치재정'의 실현을 위해 재정분권 및 재정균형 추진방안 등 세부방안 논의 가속화 필요

□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한 지자체 역량 강화

- 자치권 확대에 따른 지자체 조직역량 강화 등 사전대응 방안 마련
- 세종시·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강화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분석 및 확산,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등 지자체와 주민의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지역 균형발전 사업 내실화

- 「국가균형발전법」의 조속한 개정 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재정립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 행복도시·혁신도시 인프라 확대, 국가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등 지역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효적 대책 추진
-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부작용을 예방하고, 성공모델 발굴·확산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지속
 - 한·중 관계 개선 등 한반도 주변 4국과의 관계 복원을 통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협력토대 내실화
- ◇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에도 북 핵·미사일 위협이 빠르게 고도화·현실화되면서, 한반도 안보 위협요인 상존

주요 정책성과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 6자회담 참가국(미·일·중·러) 등 핵심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북핵 외교 전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
 - * 강도 높은 안보리 결의(2356호, 2371호, 2375호, 2397호) 만장일치 채택 등
 - 대통령 베를린구상, 유엔총회 연설 등을 통해 남북관계 비전 제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산
- 주변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 및 외교지평 확장
 -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한반도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복원
 - 대통령 국민방중을 통해 경제분야 교류·협력 재개·복원, 한반도 평화를 위한 4대 원칙* 합의 등 한중 관계 정상화를 위한 기틀 마련
 - * 한반도 내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대화·협상 통한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
 -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등 외교의 다변화·다원화로 외교의 지평을 유라시아와 아세안까지 확대
 - * 한·러 정상회담(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9월) 등 유라시아 협력 강화
 - ** 대통령 동남아 순방(11월,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계기, 신남방정책 발표

□ 북 위협 대응능력 제고 및 국방개혁을 통한 책임국방 구현

-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재확인* 및 전작권 조기전환 추진**

* 탄도미사일 탑재중량 제한 해제 합의(11월), 美 첨단 군사자산 획득 합의 등(9월)

** '18년까지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과 전환계획 공동 마련 합의(한미안보협의회 등, 10월)

- 북 핵·미사일위협에 대응한 국방예산 확대*, 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 추진 및 국방부 대북정책관실 신설 등 북핵·WMD 전담조직 강화**

* 3축 체계 전력화 예산 5,509억 증액(14.5%) 등 '18년 국방예산 전년대비 7% 증액('09년 이후 최대폭)

- 국방부 문민화, '22년까지 병력 50만명으로 단계적 감축, 병복무기간 단축(21→18개월) 등 국방개혁 추진

- 군 의문사 진상규명*, 병 봉급 인상**, 공무상 부상 직업군인 민간 병원 치료비 지원 확대 등 장병인권 및 복무여건 개선

* 군의문사 사건 재심사 및 순직 결정(5건)

** '22년까지 단계적 인상계획 수립, '18년 병 봉급 전년대비 88% 인상

□ 남북 간 화해협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노력 지속

- 대통령 8.15 경축사 등을 통해 평화와 대화의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대화 제의, 북한의 호응 유도

※ 남북연락채널 복원('18.1.3), 남북고위급회담(1.9), 남북고위급회담실무회담(1.17),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최종승인(IOC, 1.20)

-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민간교류를 허용,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도 교류 노력 지속*

* 무주 세계태권도 대회(6월),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12월, 중국) 등

- 국제기구(UNICEF, WFP)의 대북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800만달러 공여 방침 결정

- 개성공단·남북경협기업 지원대책 마련*, 정부의 책임성 제고 및 민간의 남북경협 동력 유지

* 개성공단 기업 660억원 규모 추가지원 등

문 제 점

□ 북핵문제 등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 위협 증대

- 6차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고한 대북 억제력 확보 시급
- 사이버 공격이 국방분야와 정부기관 뿐 아니라 금융기관, IT기업 등 국민의 일상으로 확산됨에 따라, 사이버안보에 대한 우려 증가

□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및 불확실성 상존

- 지속적 대화 제의 등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불응으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현안 해결에 한계
-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이후 남북관계에 불확실성 지속

□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 저하

- 다양한 통일교육 사업에도 불구하고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하락*, 통일에 대한 인식개선 미흡

* 통일필요성 대한 긍정적 인식('17년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통일연구원)
: ('14) 69.3 → ('16) 62.1 → ('17) 57.8% (20대 28.8%)

- 특히, 20대 젊은 층의 경우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따른 부정적 인식 증가 등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

□ 한·일 관계 불확실성 내재

-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문제로 한·일 관계 갈등 지속

□ 국방획득체계에 대한 국민신뢰 저하

- 방산비리 처벌·제재 강화 및 예방시스템 구축에도 불구하고, 무기체계 품질 결함 논란* 등으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개선에 한계

* 수리온 헬기 결함 논란, K9 자주포 화재사고(장병 3명 사망) 등

개선·보완 방향

- ◇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등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지속하고, 북 도발 억제를 위한 우리 군의 방위력 강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
- ◇ 대통령 방중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등을 통해 주변국과 협력 강화

□ 북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역량 강화

-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6자회담 참가국(미·일·중·러)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 지속
-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후속조치, 첨단 군사자산 획득 개발 노력을 가속화 하고,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에 역량 집중
-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인력 양성, 교육, 기술개발 및 범정부적 협력을 통한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 강화

□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 및 통일 공감대 확산 노력

-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유지·발전,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을 위한 다각적 노력 전개
-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 저하 원인 분석 및 미래세대 중심의 통일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내실화

□ 한·중 정상회담 성과 구체화 및 한·일 관계 개선 노력 지속

- 한·중 경제협력 사업 재개 등 실질협력 분야 합의사항들의 차질 없는 이행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조기 도출
- 진실과 원칙에 입각한 과거사 문제 해결 노력 지속 및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 확대

□ 방위사업 비리 척결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신뢰 회복

- 부정·비리의 근원적 차단 및 방위사업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방 R&D 역량 강화 등 국방획득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 마련

2. 일자리 창출 평가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등 일자리 정책 추진 노력을 분석·평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지원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직제순)
 - 일자리 관련성, 기관규모 등을 고려하여 3개 그룹으로 구분

구분		기 관 명
장관급 (23개)	일자리창출 중점(13개)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인프라·여건 개선 중점 (10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차관급 (20개)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 평가방법

-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자리 창출 평가지원단」 구성
 - * 정부업무평가위원, 일자리위원회 추천 민간전문가 등 참여
- 평가지표에 따라 정량·정성평가 병행 실시
- 평가 대상기관 분류에 따라 그룹 내 상대평가

□ 평가지표

○ 기관별로 일자리과제*(70), 공통지표(30), 우수사례(가점 5)를 평가

* 전체 일자리과제는 69개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일자리과제 (70)	정책이행(30)	추진계획 이행도
	목표달성(20)	성과지표 달성도
	정책효과(20)	성과지표 외 성과 및 경제·사회적 기대효과
공통지표 (30)	일자리창출 및 질 개선 (20)	근무실태 개선(초과근무 단축, 연가활성화)
		일자리 나누기(총액인건비제도 활용 신규채용)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
	일자리정책 이행노력 (10)	전담조직 운영 및 협업
		일자리 정책·성과 홍보
가점(5)	부처 자율 제출 우수사례	

2 평가 등급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순으로 표기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일자리창출 중점	인프라여건 개선 중점	
우수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보통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국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미흡	해양수산부	외교부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3 총 평

□ 주요 성과

-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사람중심 경제」로의 전환에 맞춰, 일자리창출 등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 추진
- (인프라) 중앙부처·지자체별 일자리 추진체계 구성, 일자리 관련 정책과 제도를 재설계 하는 등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체계 확립
- (공공일자리) 현장민생공무원 1만여명 충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 수행
 -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천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계획을 마련하고 6만9천여명의 전환을 결정,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고용문화 확산을 선도
- (민간일자리) ICT 융합산업·5G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성장동력 육성, 벤처펀드 확대·사내벤처 촉진 등 혁신형 창업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미래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대 마련
- (맞춤형일자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족친화기업인증 등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신중년, 노인 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늘려 사회안전망을 강화

□ 미흡한 점

- (민간확산) 공무원 확충 등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으나, 민간부문으로 파급·일자리창출 확산은 부족
 - 기업의 고용심리 저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익성·투자 격차 등은 중소기업 등 민간부문 일자리창출을 위축시킬 우려
- (사회적 갈등)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시장 차별 해소를 위한 사안들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간 이견 표출 및 갈등 발생
- (청년실업)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중이나 청년실업 해소는 여전히 더딘 상황

4 분야별 평가결과

(1) 일자리 인프라 구축

- ◇ 일자리 전담조직 구성, 재정·세제·금융 등 지원정책 개편을 통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위한 추동력 확보
- ◇ 근로시간 단축, 적극적 창업 지원 등 양질의 일자리창출 기반 공고화를 위한 노력 강화 필요

주요 정책성과

- 전담조직, 법령·통계지원 등 일자리 중심의 국정추진체계 확립
 - 모든 중앙행정기관·지자체별 일자리 정책 전담조직 마련, 시군구 일자리 책임관 지정 및 협의체 운영 등 일자리 추진체계 구축·가동
 - 일자리창출 법령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사전입안지원 및 사전 심사를 실시하여 평균 심사기간 단축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건, 평균 심사기간 2일로 전체 법령안 심사기간 11일 대비 82% 단축
 -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일자리 행정통계·동향통계*를 신규 개발하는 등 일자리 정책의 효과적 수립·추진을 위해 관련 통계 전면 보강
 - * 기업 규모별로 통계 세분화, 세부 산업별 일자리 변동을 월·분기별 제공
- 재정·세제·금융제도 등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
 -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재정 확대*로 일자리창출 적극 뒷받침, 고용효과를 반영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통해 지자체의 일자리 확충 노력 강화 유도
 - * ('17) 11.1조 → ('18) 12.4조 (11.8% ↑, 실업소득유지지원액 제외)
 - ** △신규 투자사업 심사 시 고용효과 활용, △보통교부세 '일자리 확충노력' 신설 등

- 고용증대세제 신설*,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대상 확대*** 등 고용친화적 조세제도 개편·운영
 - *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연간 300~1,100만원 공제(대기업 1년, 중소·중견기업 2년)
 - ** 중소기업 1인당 700만원 → 1,000만원, 중견기업 1인당 500만원 → 700만원
 - *** 법인 →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제외 건수 증가 : ('16) 9,294건 → ('17) 17,200건
- 창업기업 법인대표자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18년부터 완전 폐지해 실패부담완화 및 창업활성화
 - * ('16) 창업 5년 이내 기업 → ('17.8) 창업 7년 이내 기업
- 대기업의 기술유용·부당 단가인하 금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 및 고용 확대 유도 추진
 - * 기술유용 행위 근절대책('17.9),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17.12)

문제점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지연
 - 기업의 자발적 근무시간 단축은 한계가 있어 제도를 마련(근로기준법 개정) 중에 있으나, 휴일중복 할증* 등 일부 쟁점 이견으로 추진 지연
 - * 휴일근무는 휴일·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200% 지급 ↔ 150% 지급
- 창업기업 법인대표 연대보증 전면 폐지에 대비 필요
 - 연대보증 전면 폐지 시행 시 대출채권 부실화에 대한 우려로 금융기관의 창업기업에 대한 소극적 대출 등 자금공급 위축 가능

개선·보완 방향

- 근로여건 개선 정책의 추동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국회, 노동계 등과 소통·협의를 강화하여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조속히 처리
-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신용경색 등 부작용을 사전 예방, 창업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증심사 보완 등 연착륙 방안 마련

(2)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 ◇ 국가·지방 공무원 충원, 공공기관 증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등 일자리창출 선도역할 수행
- ◇ 정규직 전환에 따라 발생된 勞勞갈등 해소,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에 따른 공공·민간부문간 갈등의 예방 및 원만한 조정 필요

주요 정책성과

- 생활안전·복지·교육분야 등 부족한 공무원 충원·재배치
 - 현장공무원 17.4만명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17년 추경으로 경찰·소방 등 민생공무원 10,090명을 충원*, 대국민 현장서비스 역량 보강
 - * 국가직 5,575명 : 경찰 1,104, 군부사관 652, 교원 3,000, 생활안전 등 819
 - 지방직 4,515명 : 소방 1,500, 사회복지 1,500, 생활안전 등 1,515
 - 행정수요가 감소되는 분야의 정원을 필수수요 부족 및 현장서비스 부문으로 재배치*하여 공무원 인력 효율화와 행정서비스 질 제고 추진
 - * 정부조직관리지침 수정 : 부처별 정원 5%를 향후 5년간 재배치 정원으로 산정
 - 총액인건비제도를 개선, 일자리나누기 동참 촉진 및 민간 확산 유도
 - * 초과근무 감축, 연가사용 활성화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 절감액을 충원에 활용
- 공공기관 인력 확충 및 채용방식 개혁
 -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한 보건복지·안전분야 등 인력 2,454명 추가 증원* 포함, 공공기관 22,000여명 신규채용으로 일자리창출 선도
 - * 국가 공공기관 증원(명) : ('17 당초) 6,000 → ('17 수정) 8,454
 - 출신지·가족·학력·외모 등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기반 마련
 -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17.7)에 따라 쉰 공공기관 제도 도입 완료
- 국민 수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수요가 많고 시급한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1.1만개를 창출하여 생애주기별 서비스 확대 및 국민의 접근성 향상
 - * ('17) 보조·대체교사,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방문건강관리 등

- 여성의 양육부담 경감과 경제활동 지원, 취약계층 급식시설 안전 관리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 시설 확충 지속
 - * 국공립 어린이집(개소) : ('16) 201 → ('17) 373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개소) : ('16) 207 → ('17) 215

□ 노동시장 차별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마련, 특별 실태조사 실시 등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
 - * 상시·지속적 업무(연중 9개월, 향후 2년 이상 지속 예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파견·용역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원칙(고령, 전문직무 등 예외사유 제외)
- 연차별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17년 69,251명(잠정전환인원 93.4%)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하여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추진
 - * 총 20.5만명 : 상시·지속 비정규직(31.6) - 전환예외(14.1) + 추가전환여지(3)
 - ** '17년 잠정전환인원 74,114명 대비 기간제는 78.4%(40,057명/51,061명), 파견 용역은 126.6%(29,194명/23,053명) 수준

문 제 점

- 정규직 전환에 따른 勞勞 갈등 발생
 - 비용부담에 따른 기존 정규직원 처우악화와 입직경로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 등으로 비정규직·정규직 간 갈등 발생
- 사회서비스 시설 확충에 따른 민간영역 축소 우려
 -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 민간어린이집 관련 단체가 반발
 - *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관리동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추진

개선·보완 방향

- 勞勞간 소통의 장 마련, 당위성 홍보, 현장컨설팅 등을 통한 勞勞갈등 적극 해소 및 성과창출로 민간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확산 촉진
-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 요양,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시설 확충과 관련, 민간부문과의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협의·조정 등 강화

(3) 미래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 창출

- ◇ 4차산업혁명 선제적 대응을 위한 ICT융복합신산업 육성,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혁신성장거점 육성 등 민간 일자리창출 기반 확대
- ◇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 등 민간부문 일자리창출 저해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 일자리를 위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촉진 필요

주요 정책성과

-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기반 일자리창출 촉진
 - IoT·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융합신산업, 드론, 전기·자율주행차,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형' 新직업 창출* 가속화
 - * 고용창출 효과(천명) : ICT융합신산업(15.6), 전기차(1), 재생에너지(5.6) 등
 - 5G 네트워크 세계최초 시범망 구축(평창), 10기가 인터넷 활성화 방안 마련 등 통신 분야 융합서비스 일자리창출 기반 구축
 - * 5G 상용화에 따라 '22년까지 5.6만명 신규 고용창출 전망
- 일자리창출을 위한 혁신창업생태계 조성
 - 창업투자회사 설립요건 완화*, 벤처펀드** 조성 및 클라우드 펀딩 투자한도 확대,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확대 등 창업활성화 촉진
 - * 창업투자회사 설립 시 납입자본금 변경(50 → 20억원)
 - ** 신규 벤처펀드(조원) : ('16) 3.2 → ('17) 4.4
 - 사내벤처 분사창업 촉진, 창업부담 완화* 및 창업-성장-재도전 단계별 중소기업(1.9만개) 지원 등 창업·중소기업을 일자리 주역으로 육성
 - * 재도전성공패키지 확대 운영, 재창업 R&D 지원, 재기지원 전용펀드 조성 등
- 지역 혁신성장 거점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창출
 - 혁신도시*·산업단지 중심 국가혁신 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 농업 6차산업화지구 등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 거점으로 육성
 - * 혁신도시 1단계 완료(10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18년 18%→'22년 30%)
 - ** '17년 신규 5개 지구 선정(향후 5년간 1.5조 투자로 2.1만개 일자리 창출 예상)
 -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 창출 추진
 - * 기술개발 및 사업화분야 1,270명 고용 창출, ** '17년 시범사업 68곳 선정

- 노동자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 추진
 - 8년 만에 최저임금위원회 전체위원 참여·의결로 '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기반 마련
 - * '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 비해 1,060원(16.4%) 인상으로 역대최고 인상수준
 -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중소기업·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부담완화 방안** 추진
 - *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
 - **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완화, 부가가치세 등 세부담 완화 등

문 제 점

- 민간부문 일자리창출 여건 위축 우려
 - 중소기업 고용심리 위축*, 대-중소기업간·정규-비정규직간 격차 등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 민간의 일자리창출 저해요인 지속
 - * '17.4~'18.1분기 전체 사업체 채용계획인원은 30.3만명으로 전년동기비 1천명 감소 (이중 300인 미만 사업체 채용계획인원은 1.6% 감소)
 - ** 임금격차('16년 대기업 정규직 대비) : 대기업 비정규직 62.7%, 중소기업 정규직 52.7%, 중소기업 비정규직 37.4% 수준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노력 강화 필요
 -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수적으로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추진 중이나,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기업내 원·하청관계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상황

개선·보완 방향

- 일자리분야 확장적 재정 강화, 대중소기업상생협력(협력이익배분제 등) 생태계 조성 등 민간 일자리창출 여력 확대방안을 지속 모색·추진
- 협력적 노사관계를 조기 구축, 노동기본권 신장, 노동시장 차별시정 등 고용안정성 확보와 노동생산성 제고로 미래지속가능 일자리창출기반 강화

[4] 맞춤형 일자리 지원

- ◇ 청년, 여성, 신중년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으로 채용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 확대 및 노동시장 역동성 강화
- ◇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21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구직여건 악화에 적극 대비 필요

주요 정책성과

-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원 확대
 - 중소기업 대상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 청년의 구직 기회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함께 추진
 - *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정규직 채용시 한 명분 임금을 3년간 한시적 지원 (3차례 공모를 통해 2,036개 중소기업에 3,438명 지원 대상 선정)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대상 매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등 구직활동 적극 지원
 - * '17.12월 기준 신청자 113,561명, 총 363억 지원
 - 취업맞춤특기병제도* 활성화로 병역의무대상 청년의 직업능력 향상 및 미래 취업 기회 확대
 - * 고졸이하 병역의무자 대상 : 입영 전 기술훈련 → 기술특기병으로 군 복무 → 전역 후 취업 등 사회진출 지원 (모집인원(명) : ('16) 1,300 → ('17) 1,800)
-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강화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경력단절 예방캠페인 실시, 지자체 조례 제·개정** 등 여성의 경력개발·유지를 위한 사회적 동참 확산 추진
 - * 가족친화인증기업 수(개) : ('16) 1,828 → ('17) 2,802
 - ** 예시 :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력유지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 맞춤형 취·창업 등 지원강화로 경력단절여성 규모 감소*, 여성 고용률 상승세** 지속 등의 성과 가시화
 - * 경력단절여성 규모(만명) : ('16) 191 → ('17) 181
 - ** 여성(30대여성) 고용률(%) : ('16) 56.2(58.3) → ('17) 56.9(59.6)
 - 육아휴직 후 첫 3개월 수당 상향*,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강화** 추진 등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
 - * (기존) 월봉급액 40%(상한 100만원) → (개선) 월봉급액 80%(상한 150만원)
 - ** 둘째 자녀부터 상한액 150 → 200만원으로 인상('18.7월부터 첫째도 200만원까지 인상)

-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신중년 및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 중장년층이 은퇴 후 희망하는 **생애경로별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맞춤형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창업·재취업 가능성 제고**
 - *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17.8)
 -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대상 확대 : ('16) 재직자 → ('17) 재직자 + 구직자
 생애경력설계 참여자(명) : ('16) 12,576 → ('17) 23,009 (전년대비 83.0% ↑)
 - **공익활동 등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일자리 참여 희망 노인들의 수요충족률을 제고*하고 활동수당 인상****
 - * 노인 일자리 수(만개) : ('16) 41.9 → ('17) 46.7, 수요충족률(%) : ('16) 34.0 → ('17) 36.3
 - ** 공익활동 수당(만원) : ('16) 20 → ('17) 22 → ('17 추경) 27

문 제 점

- **청년층의 실업문제 지속 우려**
 - 신규채용 위축, 경력직 선호 등으로 높은 수준의 **청년 실업률 지속**, **'17년부터 '21년까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인구 증가** (약 39만명)로 **취업애로 심화 예상**
 - * 청년실업률(%) : ('15) 9.2 → ('16) 9.8 → ('17) 9.9
-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한계**
 -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재취업 여성 증가 등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재취업 대상이 주로 **저임금·영세기업에 집중**
 -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만명) : ('16) 15.4 → ('17) 17.1 (전년대비 11% ↑)
 새일센터 알선취업 중 67.3%가 50인미만 기업에 취업('17년 72,034건 중 69,776건 분석)

개선·보완 방향

- **청년고용 실태와 문제점 및 현재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통해 체감도 높은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강구**
 - * 청년고용정책인지조사('17.11) 결과, 일자리 질 개선, 양 확대, 정규직화 순으로 의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 경력단절예방시책 강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분야 등과 연계하여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는 고부가가치 직종에 대한 훈련 등 취업지원 확대**

3. 규제개혁 평가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를 점검·평가하여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민생안정 강화 및 국민 체감도 제고

□ 평가대상

- 29개 중앙행정기관(직제순)

구 분	경제부처(15개)	사회부처(14개)
장관급 기관 (19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차관급 기관 (10개)	관세청, 조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병무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 부처별 규제정비계획 상 정비과제 3개 이하인 부처 14개 기관 제외

□ 평가방법

-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혁 평가 지원단*」 구성·운영(총 27명)

*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규제 관련 민간전문가 등

- 과제 성격·부처특성을 기준으로 5개 분과(경제1·2, 사회1·2,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로 나누어 평가

- 평가지표에 따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

□ 평가지표

○ 규제개선(60%), 규제심사(25%), 체감도(15%)를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규제개선(60)	규제개선과제 정비 성과	·규제개혁과제 정비 실적	정량/정성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실적	정량
		·지방규제 정비	정량/정성
		·현장 규제애로 개선 실적	정량
	신산업 관련 과제 정비	·신산업 규제애로 건의 수용·이행 실적	정량
		·네거티브 규제전환 노력도	정성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 성과	·규제개선 성과 및 제도보완·개선계획	정량/정성	
규제심사(25)	규제심사절차 준수도	·규제심사절차 준수 및 영향분석 등	정량/정성
	일몰규제 정비 및 규제등록 실적	·일몰규제 정비 및 규제등록 실적	정량
체감도(15)	규제개혁 만족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정성
	규제개혁 국민소통 실적	·규제개혁 관련 언론소통·현장행보 등	정량/정성
기타(+3)	가점	·규제개혁 교육 참여도 및 활성화 노력	정량

2 평가 등급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순으로 표기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특허청
보통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미흡	교육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병무청, 소방청

3 총 평

□ 주요 성과

- 신산업 분야 규제혁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기여
 - * TF 구성('17.7),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발굴 가이드라인 배포('17.10) → 자동차 분류 체계 유연화 등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대상 과제 38건 개선안 마련('17.12)
 -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신산업 분야 현장의 규제애로 발굴·혁파 → 간담회·현장방문 등 현장소통(32회)을 통해 과제 발굴,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허용 등 89건 해소
-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여 민생안정 및 중소기업 부담 경감
 - * (행정조사) 행정조사 전체(608건)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17.5~8)을 거쳐 총 175건 정비 → 행정조사 혁신방안 보고 추진
 - * (지역규제) 지자체 건의, 부처 검토 및 조정 등을 거쳐 47건 정비 → 지역발전·주민 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
 - * (경쟁제한 규제) 과제 발굴, 소관부처 검토 및 조정 등을 거쳐 경쟁제한 규제 25건 개선 →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
- 현장·생활 밀접 규제 혁파를 통해 현장체감도 제고
 - *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국무총리 주재로 2회에 걸쳐 개최
△중소·벤처기업 현장애로 혁파방안 및 41건의 애로 해소 발표(1차)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및 23건의 애로 해소 발표(2차)
 - * (현장 규제애로)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 청취를 위한 규제개선 간담회 29회 개최 → 발굴과제에 대한 부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103건 과제 개선(5월~12월)
 - * (규제개혁신문고) 온라인을 통해 수요자가 직접 규제애로를 건의할 수 있는 규제개혁 신문고 운영 → 접근성 향상 및 신속한 대응으로 체감도 제고에 기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신산업 분야 및 규제개혁 제도 관련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국회 협력 강화
 - * (신산업) 정보통신융합법(국회 계류 중) 외 산업융합촉진법 등 3개 법안 준비 중 (규제개혁 제도) 규제 차등화 적용 등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추진(국회 제출, 12월)
-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 및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하여 현장소통·국민 공모 등 적극적 과제 발굴 및 범부처적인 해결 노력 경주

4 분야별 평가결과

(1) 신산업 분야 규제혁파

주요 정책성과

- 미래 신산업 대비 규제체계 전환 및 현장애로 해소 노력 추진을 통해 신제품·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 신산업 분야 활성화 촉진
- 기존의 네거티브 개념(원칙허용-예외금지)을 확장하여 우선허용-사후 규제 중심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추진
 - * TF 구성(17.7월)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발굴 가이드라인 마련(17.10월) →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대상 과제 38건 개선안 마련(17.12월)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사례 >

- ▶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국토부)

기존 자동차 종류를 구조, 크기, 배기량 등에 따라 제한적 열거

개선 혁신카테고리 도입하여 차종 구분 유연화

- 민간전문가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 신산업 분야 현장의 규제애로 발굴·해소 추진**

* 5개 분과(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120명

** 간담회, 현장방문 등 현장소통(32회)을 통해 과제발굴, 89건 해소

< 신산업 분야 현장애로 해소 사례 >

- ▶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허용(농식품부)

기존 '15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 건축물에만 태양광발전 설치 허용

개선 준공시기에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에 태양광발전 허용

문 제 점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에 대한 관련 단체 및 기관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발 등으로 적극적·자발적 과제 발굴노력 미흡

개선·보완 방향

- 과제 발굴 영역 확대*를 통해 민간부문으로 효과 확산 촉진 필요
 - * (부처·지자체) 법령 → (공공기관) 규정·지침

(2) 국민불편·민생부담 야기 규제혁파

주요 정책성과

-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통해 국민 편익 증진과 중소기업 부담 경감
 - 국민과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불편·부담 사항으로 인식되는 행정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 제정('07) 이후 처음으로 전수 점검·정비
 - * 175건 정비 : 조사 폐지(5건), 실시주기 완화 등 조사방식 개선(170건)

< 행정조사 정비 사례 >

- ▶ 건설산업정보 종합 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항목 간소화(국토부)
 - 기존** 건설업자는 공사계약 체결 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140개 항목 기재
 - 개선** 중복·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하여 기재항목을 87개로 축소

- 불합리한 지역규제를 혁파하여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법령·절차 등을 지역 요구와 현실에 맞게 개선
 - * 47건 개선 : 낙후지역 재생(23건), 지역경제 활성화(14건), 주민불편 해소(10건)

< 지역규제 혁파 사례 >

-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폐교재산 활용 기숙사 설치 허용(해수부)
 - 기존**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기숙사 입지 불가능
 - 개선** 폐교재산을 활용한 기숙사의 경우 입지 허용

-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규제를 발굴·혁파
 - * 25건 개선 : 먹거리·생필품 분야(10건), 레저 분야(5건), 기타(10건)

< 소비자 편익 저해 규제 혁파 사례 >

- ▶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가능구역 확대(국토부·국방부)
 - * 현행 29개 비행가능구역에서 김제·고령 추가(총 31개로 확대)

문 제 점

- 여전히 보건·복지 등 분야에서 국민들이 생활속 불편사항 지속 제기

개선·보완 방향

- 개선요구·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국민 공모·건의를 통해 과제 발굴·개선 추진

(3)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혁파

주요 정책성과

□ 현장·수요자 밀착형 규제 혁파를 통한 현장체감도 제고

-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개최를 통해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선도 (국무총리 주재, 2회)

* △중소·벤처기업 현장애로 혁파방안 및 41건의 애로 해소 발표(1차),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및 23건의 애로 해소 발표(2차)

- 지자체·협회·기업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 혁파

* 현장 규제애로 청취를 위한 규제개선 간담회 29회 개최 → 발굴과제에 대한 부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103건 과제 개선

< 현장 규제애로 혁파 사례 >

- ▶ 연구소기업 자본금 규모별 설립주체의 최소지분을 완화(과기정통부)

기존 연구소기업 설립주체의 자본금 지분율 요건이 일률적으로 20% 규정

개선 연구소기업 설립주체의 자본금 지분율 요건을 규모에 따라 차별화(10%, 15%, 20%)

- 온라인 규제애로 처리시스템인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 규제혁파 추진

* '17년 1,987건 규제애로 사항 검토·처리

< 규제개혁신문고 혁파 사례 >

- ▶ 식품표시제도 규제운영 합리화(식약처 등 8개 부처)

기존 상품포장에 의무화된 식품표시규제를 8개 부처, 15개 법령에서 각각 규정

개선 시행시기 통일, 표시규제 정보의 통합제공 등 상품포장 변경 최소화

문 제 점

-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규제혁파 노력 강화 필요

개선·보완 방향

- 협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건의사항을 상시 접수하면서 직접 현장 방문 등을 통한 과제 발굴 병행 추진

4. 정책소통 평가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에 대한 각 부처의 정책소통 추진노력과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이해를 높이고 정책 성과에 대한 체감도 확산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 평가방법

-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정성 평가 병행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정성평가의 경우 민관합동 「정책소통 평가지원단」 구성*, 평가실시

* 3개 그룹 각 7명(민간전문가 5, 문체부 국민소통실 2) 총 21명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책소통 활동 (31점)	· 정책소통 기획 실적	7점
	· 기관 간 정책소통 협업 실적	16점
	· 정례브리핑 및 언론 반영 실적	8점
정책소통 성과 (69점)	· 방송·신문 보도성과 * 외신 반영 실적	13점 (±2점)
	· 기관 정책소통 활동성과	16점
	· 온라인 정책소통 활동성과 * 온라인 홍보체계 강화 노력	40점 (+1점)
기관의 쉽고 바른 보도자료 사례 평가		±2점

* 100점 만점 평가 후 10점으로 환산

2 평가 등급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 순으로 표기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보통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미흡	통일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방위사업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 주요 성과

- 새 정부 국정기조와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이해 제고
 - 일자리정책·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국정과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계부채 등 정책현안, 평창 동계올림픽 불입 등 범부처 협력 홍보 추진
 - 정책홍보전략회의(차관급) 신설로 정책과 홍보를 연계한 효율적 협업체계 구축
 - ‘광화문 1번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등 국민 목소리를 듣는 새로운 정책소통방식 제시
- 온라인 소통 강화를 통해 대국민 직접소통·쌍방향 소통 확대
 - SNS 온라인 중계, 정책질의·제안 관련 의견수렴 및 참여형 이벤트 등
 - * 주거복지 정책을 제안한 국민 50명과 국토부 장관과의 토크 콘서트 및 온라인 생중계 등
 - 온라인 콘텐츠 품질 제고를 위해 콘텐츠 통합시스템 「정부 SNS Live」 구축·운영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매체전략 수립 필요
 - 청년·주부·자영업자 등에 특화된 매체·콘텐츠 활용으로 체감도 제고
 - * (예) 청년층에는 웹툰·웹드라마, 장년층에는 버스·옥외광고 활용 등
- 위기관리 소통노력 강화 필요
 - 국내외 위기관리 우수사례 발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위기관리 소통 매뉴얼 개발 등
- SNS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온라인 정책소통 전문성 제고 필요
 - 맞춤형 온라인 전문교육 강화, 온라인 소통 위상 제고 등 추진

4 분야별 평가결과

(1) 정책소통 활동

주요 정책성과

- 새 정부 출범 계기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에 대한 적극적 소통 추진
 - 새 정부 출범 100일 계기, 국정비전을 통한 국민 대통합 캠페인 추진* 및 새 정부 초기 대표 소통플랫폼 ‘광화문 1번가’ 소통** (5~7월)
 - *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라”(9~10월) / “국민 대통령 시대” 광고 등(7~9월)
 - ** 열린포럼, 국민마이크, 찾아가는 광화문 1번가 등
 - 새 정부 비전 및 국정과제 관련, 기획영상·카드뉴스 등 비주얼 콘텐츠 제작·확산*으로 국민공감대 형성
 - * “정책으로 꽃길 걷기”(뮤직비디오), “내가 꿈꾸는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영상광고) 등
- 범정부 협력소통 시스템 강화
 - 정책홍보전략회의 신설로 정책과 홍보 연계 강화
 -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정책홍보전략회의(국조실장 주재, 매주)를 통해 정책홍보 일정 조율 및 효과적인 홍보 방안 수립
 - 대변인협의회를 통해 국정과제 등 홍보계획 논의 및 홍보 협력 강화
 - 정부 부처 및 산하·공공기관 보유 613개 매체*를 활용하여 콘텐츠 확산
 - * 영상물 492종, 간행물 121종 등 613개 매체
 -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붐 조성을 위해 범정부 총력 홍보* 추진
 - * (전 부처) 각 부처·공공기관 보유 매체, 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배너 활용 등 (과기부, 해외문화홍보원) 평창 ICT 동계올림픽 외신홍보 협력(17개국 18개 매체)

문 제 점

- 국민의 정책소통 참여 확대에도, 수요자별 고려는 다소 부족
 - 정책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제작 및 참여방안 다각화를 통해 국민 정책 체감도 제고 필요
- 정책 오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미흡
 - 오보 및 왜곡보도에 대해 해명자료 배포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총 1,536건), 기사에 해명이 반영된 사례는 447건(29.1%)에 불과
- 북핵 등 대내외적 위험요인에 대한 위기관리 소통 강화 필요
 - 북핵 위기·사드갈등 등에 따른 안보 불안감, 지진·화재·AI 등 국민 생활 위해요인의 증가에 따른 위기관리 소통 필요성 급증

개선·보완 방향

- 정책 수요자를 고려한 다각적인 소통참여 확대
 -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콘텐츠 제작, 정책소통 과정(제작·확산·환류)에 국민참여 방안 강구(청년크리에이터 활성화, 국민 모니터링단 신설 등)
 - 1인 미디어 등 다각적인 민간채널 협업 노력,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민소통포럼' 등 신설 추진
- 정책 오보 발생 시 충실한 설명 등 대응 노력 강화
 - 오보 발생 시 해당 언론사 대상 적극적 설명, 해명자료 배포 및 브리핑 실시
- 위기관리 소통 노력 강화
 - 국내외 위기관리 사례 소개 등 위기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 컨설팅, 메시지 개발, 사전발표 협의 등 범부처 현안위기관리 소통 지원 추진

[2] 정책소통 성과

주요 정책성과

- 기관장 소통 강화 및 주요정책에 대한 전략적 소통 추진
 - 기관장 방송출연·현장설명회 등 언론·현장소통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 강화
 - 매월 중점 소통과제 선정, 소통방식 다변화 등 전략적 홍보* 추진
 - * (과기부) 대통령 주재 '4차산업혁명위원회 1차 회의' 홍보 시 타깃별(국민+오피니언 리더) 홍보 전략을 차별화하고, 온라인 생중계 등 직접소통 추진

- 온라인 콘텐츠 품질 제고를 위한 부처간 협업 시스템 구축
 - 전 부처 SNS 채널에 게재되는 콘텐츠의 실시간 수집·열람이 가능한 콘텐츠 통합시스템 「정부 SNS Live」 구축*(17.9월)
 - * 각 부처에서 운영중인 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카카오토티스토리·인스타그램 등 6개 채널 198개 대상

- 새로운 온라인 소통기법 및 O2O 연계 방식(Online to Offline) 등 활용 소통 추진
 - 라이브 방송, 웹 예능* 등 뉴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
 - * (고용부) 리얼 체험 버라이어티 웹 예능 '어느날 갑자기' 네이버티비 등 게재(94만명 조회)
 - 온라인 영향력이 큰 1인 창작자와의 협업*으로 공감대 형성
 - * (해수부)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71세의 최고령 디지털 인플루언서인 박막례 할머니와 협업, 전 세대를 아우르는 효과(20만명 조회)
 - 토크콘서트, 팸투어 등과 연계된 O2O 방식* 콘텐츠·이벤트 활성화
 - * (국토부) 온라인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제안한 국민 50명을 초대, 장관과의 대화(토크콘서트)를 온라인 생중계

문 제 점

□ 모바일 트렌드에 부합하는 사용자 친화적 소통 노력 부족

- 모바일 중심으로 온라인 이용 패턴이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노력 필요

* PC·TV·모바일 중 모바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율은 53.5% 수준('15년), 온라인 사용 시 모바일만 사용하는 비율은 '13년 3.6% → '17년 19%

□ 외신 소통의 중요성 증대에 따른 체계적 대응역량 강화 필요

- 안보·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 등 기타 분야에서도 외신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매체 등 외신 채널도 다양화되고 있으나 체계적 대응에 한계*

* 외신대변인 있는 6개 부처(기재·외교·통일·국방·산업부·금융위) 대상으로 외신 대변인협의회를 운영중이나, 외신대변인이 없는 부처는 체계적 대응에 한계

개선·보완 방향

□ 모바일 환경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및 확산 강화

- 온라인 환경변화에 따른 사용자 친화적 콘텐츠 제작 활성화 필요
- 교육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온라인 소통역량 제고

□ 외신 관련 소통체계 정비 및 채널 다각화

- 외신대변인이 있는 부처 외에 사회 부처 등을 포함하여 외신대변인 협의회 확대 운영 추진
- 기존 외신매체를 포함하여 인터넷 등 다양화된 외신채널 대상으로 홍보 강화 등 소통채널 다각화 추진

5. 국민만족도 평가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정책과제와 소통노력 등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
 - (정책 만족도) 국정과제(100개) 및 주요정책과제별(37개) 정책추진 성과·노력 등에 대해 국민체감도 평가
 - (소통 만족도) 부처별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소통 추진노력 및 효과성 등에 대해 국민만족도 평가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 평가방법

-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조사기관에 설문조사 의뢰
 - (정책 만족도) 전국 20세 이상 성인 총 17,050명* 대상 조사 ('17.11.2~30, 닐슨코리아)
 - * 일반국민 11,000명, 정책수요자 6,050명
 - (소통 만족도) 전국 20세 이상 성인 총 1,200명 대상 조사 ('17.11.6~24, 월드리서치)
- 과제별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부처별 점수 부여

□ 평가지표(1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책 만족도	민주성	·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정도	5
	적극성	· 정책목표 달성에 대한 기관 노력도	
	대응성	·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상황변화 및 문제점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효과성	· 정책 추진으로 달성된 성과의 정도	
	체감만족도	· 국정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소통 만족도	정책소통 프로그램	· 정책소통 프로그램 인지도 및 접촉빈도	5
		· 정책소통 프로그램 적합성	
	정책소통 효과	· 정책소통 만족도	
		· 정책에 대한 수용도	

2 평가 등급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순으로 표기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법무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보통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미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3 총 평

□ 조사 결과

○ 정책만족도는 4.63점(7점 만점)으로, '보통(4점) 이상'의 만족 수준

- 의료·복지·주거 정책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중소기업·문화·교육 관련 정책의 만족도는 낮은편

※ 높은과제 :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및 예방접종 무료 지원(5.28)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5.18)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5.02)

낮은과제 : 예술인 창작 지원 및 복지 강화(4.1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4.2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4.26)

○ 소통만족도는 60.7점(100점 만점)으로, '보통(50점) 이상'의 만족 수준

- 의료·안전 분야 소통만족도가 평균대비(60.7점) 높은 반면, 남북관계·방위산업 분야의 소통만족도는 낮은편*

* 해당정책의 정책소통 활동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평가

※ 높은과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66.96), 지진 대응체계 강화(65.91)
낮은과제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56.55), 방위산업 육성(56.92)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만족도가 낮은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는 현장 소통강화 및 맞춤형 정책 추진 등을 통한 불만족 해소 노력 필요

○ 국민들이 정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정책소통 노력 지속 필요

4 분야별 평가결과

(1) 정책 만족도

□ 장관급 23개 기관의 정책만족도 평균은 4.62점(7점 만점)으로,
‘보통(4점) 이상’의 만족 수준

○ 의료·복지·주거·보훈* 분야의 정책 추진 노력에 대해 긍정적 평가

*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및 예방접종 무료 지원(복지부, 5.28)’, ‘공공임대 등 주거복지 확대(국토부, 5.02)’, ‘국가유공자 보상·예우 강화(보훈처, 4.76)’ 과제 등

○ 예술인 복지·중소기업 지원·대입제도* 등의 정책추진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수준

* ‘예술인 창작 지원 및 복지 강화(문화부, 4.11)’,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중기부, 4.20)’, ‘교과과정 개편 및 대입전형 개선 등 공교육 혁신(교육부, 4.26)’ 과제 등

□ 차관급 20개 기관의 정책만족도 평균은 4.65점(7점 만점)으로,
‘보통(4점) 이상’의 만족 수준

○ 산림휴양·민생치안·지진 예방* 등 현장중심의 정책 추진 노력에 대해 높은 평가

* ‘산림교육·산림휴양(산림청, 4.88)’, ‘민생치안 범죄 경감 및 사회적 약자보호(경찰청, 4.84)’, ‘기상·지진 재해예방 지원정보 개선(기상청, 4.83)’ 과제 등

○ 공무원 인사관리·방위산업·특허 및 상표 관리* 등의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해 낮은 평가

* ‘고공단 및 공무원 징계제도 개선(인사처, 4.40)’,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방위력 지원(방사청, 4.48)’,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서비스 제공(특허청, 4.50)’ 과제 등

[2] 소통 만족도

□ 장관급 23개 기관의 소통만족도 평균은 61.38점(100점 만점)으로, '보통(50점) 이상'의 만족 수준

○ 건강보험 정책·검찰개혁·유아 공교육 강화* 등의 소통노력 수준을 높게 평가

* '건강보험 보장 강화(복지부, 66.96)', '검찰개혁(법무부, 65.27)',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교육부, 64.78)' 과제 등

○ 남북관계·사이버 폭력 예방·서민금융 지원* 분야 등의 정책 소통 노력은 낮게 평가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통일부, 56.55)',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방통위, 57.63)' '서민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금융위, 58.19)' 과제 등

□ 차관급 20개 기관의 소통만족도 평균은 59.98점(100점 만점)으로, '보통(50점) 이상'의 만족 수준

○ 지진 대응체계 강화·민생치안·불법 외국어선 근절* 분야의 정책정보 유용성을 높게 평가

* '지진·지진해일 감시 및 대응체계 강화(기상청, 65.91)',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경찰청, 65.11)', '해양주권 수호(해경청, 61.69)' 과제 등

○ 공무원 인사·공공조달 제도·행정신고제 개선 노력* 등에 대한 정책 소통효과는 낮게 평가

* '국민참여형 인사시스템 국민추천제(인사처, 55.97)', '신고제 합리화(법제처, 56.41)', '창업·벤처기업 온라인몰 벤처나라(조달청, 56.52)' 과제 등

6. 기관공통사항 평가

1 현안관리

가.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각 부처의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상황 및 성과를 평가, 환류하여 지시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성과 제고

□ 평가대상

- (대상 지시사항) 새정부 출범 이후 시달된 대통령 지시사항 중 부처별 추진계획 수립이 완료된 지시사항 (부처별 기준 192건)
- (대상 기관) 43개 중앙행정기관

□ 평가방법

- 지시사항별로 ±3점 가감점 부여하여 부처별 산술 평균

□ 평가지표 (±3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방법	배점(±3)
계획수립 적절성	· 지시취지 부합 여부, 내용 충실성 등	정성	0~3
집행 이행도	· 추진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여부	정량 정성	(-)2~0
시스템 활용도	· 추진계획 및 실적의 기한내 등록 여부 등	정량	(-)1~0

나. 평가 등급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순으로 표기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보통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병무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미흡	통일부, 보건복지부	방위사업청, 소방청

다. 총 평

□ 주요 성과

○ 대통령 지시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국정운영 성과 제고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새로운 국정철학을
공직사회에 조기 정착

* △가습기 살균제 정부 책임 인정 및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세월호 기간제
교사 신속 순직 인정 등

- 국민 안전*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범부처 차원 신속·적극적 대응

* AI 방역 종합대책,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마련 등

**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척결, 공관병 갑질 행태 근절 등

○ 지시사항 관리체계 개선으로 각 부처의 이행력 제고

- '17년 정부업무평가에 신규 반영* 및 소통형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시사항 이행에 대한 관심도·적극성 제고

* 43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계획수립 적절성, 계획 이행도 등 평가

** 지시사항 별 추진계획 및 이행현황을 모든 관계자가 수시로 확인·첨언 가능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각 부처의 지시사항 이행관리 강화

- 대통령 지시사항의 원활한 이행과 실질적 성과 구현을 위해, 국정
과제 수준의 철저한 관심과 관리노력 기울일 필요

○ 여러 부처가 관련된 지시사항에 대한 부처간 협업 강화

- 주관부처가 중심이 되어 범부처 시각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지시사항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할 필요

라. 분야별 평가결과

(1) 국정운영 투명성·책임성 제고

주요 정책성과

- 새정부 출범 초기 새로운 국정철학*의 조기정착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에 기여
 - *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등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갈등사안에 대한 국민참여형 해결방안* 제시
 - * 시민참여단 471명, 숙의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등을 對정부 권고
- 가습기 살균제 정부 책임 인정* 및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 *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정부책임 인정하고 사과 표시(8월)
 - ** 폐손상 외 태아피해, 천식까지 피해인정기준 확대로 정부지원 대상(1·2단계) 피해자 415명 인정, 3·4단계 피해자 및 부도기업 피해자를 위한 특별구제계정 마련 등
- 세월호 기간제 교사에 대하여 신속하게 순직 인정 절차*를 완료
 - * 국조실, 교육부, 인사처, 보훈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무원연금법 등 신속 개정 → 세월호 침몰 사고 시점부터 소급하여 연금 지급중('17.9~)

문제점

- 국정운영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무중 사망 비정규직 근로자의 순직 인정 등을 위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

개선·보완 방향

-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지시사항 이행 법안의 국회 통과노력 강화 및 법안 통과 지연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검토

(2) 국민 안전의 보장

주요 정책성과

□ 국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관리 구현

- 「AI 방역 종합대책*」을 마련(9.7)하여 AI 발생 이전 평시에 방역을 강화하는 예방 중심의 근본적 방역 체계로 전환

* △상시 예방 체계 조기 구축, △질병에 강한 가금 산업으로 구조 혁신, △과학기술로 위험 관리 강화, △지자체와 농업인의 자율·책임 방역 지원

-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7.28) 추진으로 교통사고 예방 강화

*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광역버스 휴식시간 확대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자동비상제동장치 등),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운수업체 실태점검 등)

- 관계부처 합동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9.26)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건강권을 보장

* △대규모 배출원(석탄발전소 등) 집중 저감, △주변국(중국 등)과 환경협력 강화, △민감계층 집중보호, △과학적 연구기반 강화로 '22년까지 30% 감축

문 제 점

-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재해관리 체계 전반 재검토' 지시에도 불구하고, 대응 미흡 및 거듭된 사고* 발생

* 영흥도 낚싯배 사고, 용인·평택 타워크레인 붕괴, 제천 화재 사고 등

개선·보안 방향

- 중대 사건·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현장에서의 실행력 제고* 등을 통해 '국민 안심사회' 구축

*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간담회 및 현장점검 등 추진

(3) 주요 현안의 신속·적극 대응

주요 정책성과

- 국민적 현안에 대해 쏠부처 차원의 점검 및 대응조치 추진
 -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대응조치로 공정사회·공정경쟁 기반을 확립
 - * 330개 공공기관 전수조사 진행(10.16~12월末), 채용비리신고센터 설치·운영
 - 「공관병 갑질사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눈높이를 감안, 쏠부처 실태조사를 통해 '갑질'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 * 공관병(210명), 골프·테니스병(56명), 운전의경(361명) 폐지 등
- 장기 미해결 과제에 가시적 조치 창출
 - 법무부 탈 검찰화 및 검찰개혁*의 신속한 착수 및 이행
 - * 법무부 검사 단수직위 42개에 일반 공무원도 보임 가능하도록 직제 개정, 검사장급 현원 조정(48석→43석) 및 정원 감축(49석→48석)

문제점

- 일부 다부처 공통 지시사항에 대한 부처간 유기적 연계 부족으로 지시사항의 신속·원활한 이행 및 지시이행 성과 제고에 한계
 - ▶ 「비혼모를 포함한 다양한 출산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과정에서 부처간·부처내 긴밀한 협업 부족으로 종합적 시각 없이 지엽적인(인공임신중절 예방) 계획 마련

개선·보완 방향

- 비혼모 지시사항에 대한 범부처 시각에서의 종합적·체계적인 이행 방안 마련과 함께 주관부처의 책임감 있는 이행 필요

2 갈등관리

가.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공공갈등 관리실태 점검·평가를 통해 부처의 갈등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독려하고 실질적 갈등해결과 예방을 도모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 평가방법

- 민관합동평가단 구성·평가
 - 부처 특성에 따라 장·차관급 4개 분과(경제1·2, 사회1·2)로 구성

□ 평가지표 (±3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갈등과제 관리 (40%)	· 갈등과제 해결을 위한 소통 노력
	· 국정협의체를 활용한 갈등해결 노력
	· 참여적 의사결정기법을 활용한 창의적인 노력 등
갈등관리 제도운영 (30%)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실적
	· 갈등영향분석서 작성실적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
갈등관리 성과 (30%)	· 갈등완화·해소 정도 및 성과

나. 평가 등급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 순으로 표기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교육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새만금개발청
보통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관세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미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다. 총 평

□ 주요 성과

- (과제관리) 새 정부 출범이후 각 부처의 적극적인 갈등관리 노력으로 집중관리 25개 갈등과제 중 16개 과제 해소·진전

※ 집중관리 과제 외 부처관리 과제도 진전된 성과 도출
(종교인 과세, 화학물질 등록대상 확대, 통일문화센터 건립 등)

(해소)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검토, 청탁금지법령 개정,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철회, 용산 장외경마장 이전, KTX 무안공항 경유 등 6개

(진전) EEZ 바다모래 채취, 세월호 추모사업, 수능·자사고 교육현안 대응,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 4대강 보 개방 등 10개

- 공론화(신고리), 협약체결(용산 장외경마장), 법원조정(제주 구상권) 등 시민참여 기반의 다양한 사회적 합의 모델 적용으로 갈등해소
- 국정협의체 논의*, 장차관급 현장방문** 등 갈등해소 계기 마련

*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9회 △ 갈등관리정책협의회 등 국정협의체 54회

** △ 종교인 과세(기재부, 9회) △ 세월호(해수부, 6회) △ 교육현안(교육부, 5회) 등 80회

- (제도운영) 갈등관리 관련 협의체 운영, 갈등영향분석 실시 등 갈등해소를 위한 부처별 갈등관리제도 운영실적 대폭 증가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16년) 15개 부처 → ('17년) 41개 부처

* 갈등조정협의회(집중관리 과제 기준) : ('16년) 45.7%(16개/35개) → ('17년) 84%(21개/25개)

* 갈등영향분석(집중관리 과제 기준) : ('16년) 57.1%(20개/35개) → ('17년) 88%(22개/25개)

※ 갈등관리를 정부업무평가에 신규 반영함으로써 그 동안 미진했던 각 부처의 갈등관리 노력과 성과를 제고하는 효과 거양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제관리) 정책수립 단계부터 갈등요인 파악 등 선제적 대응 강화, 지속되는 갈등사안에 대해서는 창의적 대안 마련 등 갈등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제도운영)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영향분석의 내실화·활용성 제고, 갈등관리 노력·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필요

라. 분야별 평가결과

(1) 갈등과제 관리

주요 정책성과

□ 다양한 사회적 합의모델 적용으로 정책결정의 수용성 제고

- **신고리 5·6호기(공론화)** : 공론화위원회를 구성(17.7)하고 일반 시민의 참여와 숙의에 기반한 공론조사(17.8~10)를 실시하여 에너지 분야의 첨예한 갈등을 원만히 해소
- **용산 장외경마장(협약체결)** : 반대단체 포함 이해관계자 협의체(지역상생협의회, '17.3~9)를 구성,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여 용산 장외경마장 이전 협약 체결(17.8)
-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법원조정)** : 민·군 상생 및 화합지원을 위한 발전자문위원 위촉(17.7), 현장방문(17.8, 차관) 등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법원 직권조정안 수용(17.12)

□ 국정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갈등사안 집중 논의·조정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 등 노동 현안(고용부) △수능·자사고 등 교육 현안(교육부) △EEZ 바다모래 채취(국토부·해수부) 등 갈등현안 19차례 논의

□ 장·차관급 현장방문(80회) 등 갈등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대폭 강화

- **종교인과의(경제부총리, 9회)** : 대한불교 조계종(17.8), 천주교 주교회의(17.8), 기독교 총연합회(17.9), 유교(17.10) 등 7대 종교계(9개 종단) 지도자 예방
- **교육현안(사회부총리, 5회)** : 권역별 학부모 경청투어(17.7, 수능개편), 한국우진학교 방문(17.9, 특수학교 설립), 한서고 방문(17.11, 고교학점제) 등

문 제 점

□ 갈등 예방보다는 갈등현안 발생 이후 대응에 집중하는 경향

□ 첨예한 이견대립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갈등현안에 대한 대안검토 등 적극적인 해소 노력 다소 부족

개선·보완 방향

□ 정책 수립단계부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갈등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선제적 대응 노력 강화

□ 지속되고 있는 갈등사안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창의적 대안 마련 및 현장소통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갈등관리 추진

(2) 갈등관리 제도운영

주요 정책성과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16년) 15개 부처 → ('17년) 41개 부처

* 부처별 갈등과제 관리, 갈등관리 제도운영 등 총괄 역할 수행

- (우수사례 : 국토부) 전체회의와 분야별위원회(국토, 교통)로 이원화하여 운영, 갈등 영향분석서 작성 및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심의 등 체계적 운용

- (갈등조정협의회*) ('16년) 45.7%(16개/35개) → ('17년) 84%(21개/25개)

* 민간 이해관계자 포함, 갈등 사안 논의·조정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집중관리 과제 기준)

- (우수사례 :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 관련 갈등조정협의회는 대한약사회 등 9개 전문단체가 참여, 7개 그룹 17회 협의를 통해 갈등예방

- (갈등영향분석*) ('16년) 57.1%(20개/35개) → ('17년) 88%(22개/25개)

* 갈등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갈등요인(대상, 주체 등) 사전 분석자료(집중관리 과제 기준)

- (우수사례 : 국방부) 군공항 이전 관련 전체 사업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뿐만 아니라 대구·수원 등 대상지역별 갈등영향분석서 작성·활용

문 제 점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부처별 설치는 대폭 증가 하였으나, 연간 1~2회 개최 및 서면 회의로 대체 등 일부 부처 형식적 운영
- (갈등영향분석) 일부부처는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책수립 시 의견수렴 결과 등으로 대체
- (인센티브) 갈등관리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추동력 저하

개선·보완 방향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부처별 갈등과제 선정 및 갈등관리 방안 모색 등 운영 활성화를 통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
-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 전문가 자문, 담당자 교육 등 영향분석에 대한 이해도 및 활용성 제고
- (인센티브) 성과급, 인사고과 반영 등 갈등관리 동기부여 방안 마련

3 인권개선

가.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고, 인권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 평가방법

- '17.7.~12월 기간 중 인권위가 통지한 권고의 이행 여부
- 평가대상 기관의 기타 인권개선 노력

※ 기타 인권개선 노력은 '17.1~7월 기간의 실적도 포함하여 평가

□ 평가지표 (±2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권고이행 (70%)	· 권고 이행계획 회신(의무기간 내 회신 여부)
	· 회신 의무기간(90일) 초과(1개월 당 감점)
	· 권고 이행의 충실도
	· 권고 이행의 난이도
기타 인권개선 노력 (30%)	· 평가 대상기관이 제출한 인권개선 내용의 우수성 ※ 평가대상 기간 동안 권고를 받지 않은 기관의 경우 기타인권개선 노력을 만점(2점)으로 환산하여 평가

나. 평가 등급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 순으로 표기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통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방청, 특허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미흡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산림청,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다. 총 평

□ 주요 성과

- (권고이행) 인권위 권고에 대한 회신의무 준수율·수용률 향상 및 기관 차원의 관심 확대
 - 9개 기관의 36개 권고(17.7~12) 이행계획 회신율·수용률 100%
 - * 최근 5년간 피권고기관 회신율 평균 75%, 수용률 평균 87%
 - 인권위 권고에 대하여 최대한 수용을 위해 권고 불수용 재검토, 대안·보완조치 사안 논의 등 적극 검토
- (기타 인권개선 노력) 인권 보호 상황의 점진, 인권 교육 확대 등 인권 인식 확대 기반 마련
 - 기관 주요사업의 목적으로 '인권보호·향상' 추가, 기관내 인권교육 확대 등 인권인식 확대 노력
 - 이행의무가 없는 '의견표명'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수용
 - * 외국인보호시설의 외부 교통권 보장 의견표명 수용(법무부), 군부대 피해 발생 공상재심사 의견표명 수용(국방부)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권고 취지에 맞게 실제 이행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관리 필요
- 기관의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인권 사각지대 및 보완과제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기관 내 인권침해, 차별사건 예방·대응을 위해 인권존중 문화 조성 및 제도 개선 필요

라. 분야별 평가결과

(1) 권고 이행

주요 정책성과

□ 권고이행계획 회신의무 준수율·수용률 향상

- 9개 기관, 36개 권고(17.7~12) 이행계획의 의무기간 내 회신율·수용률 100% (1개 권고 일부수용 포함)로 권고 수용 확대*

* 최근 5년간 피권고기관 회신율 평균 75%, 수용률 평균 87%(진정 90%, 정책 84%)

□ 인권위 권고에 대한 관심 확대

- 권고 불수용에 대한 재검토, 대안·보완조치 사항 논의* 등 인권위 권고에 대한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

* 권고에 대한 일부 (불)수용 검토시 정책조정실무회의(차관주재) 절차 진행(고용부) 등

- 인권보호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등 자발적 개선 노력

* 기관 소관 업무에서 인권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 의견 수렴·협의 실시(국토부) 등

문 제 점

□ 권고의 수용과 실제 이행과의 괴리

- 권고 내용이나 이행 절차 등이 복잡할 경우, 향후 실제 이행과정에서 권고의 수용 취지와는 다르게 집행되거나 이행이 지연*

*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 권고 이행계획 회신 후, 실행이 1년 지연 등

개선·보완 방향

□ 권고이행 결과에 대한 자발적인 점검 유도

- 권고의 취지 맞게 실제 이행이 이뤄졌는지 관리·점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점검체계 마련

(2) 기타 인권개선 노력

주요 정책성과

□ 기관 차원의 인권 사안 점검 및 인식 확대

- 사회적 약자, 소수자 대상 업무 점검·확인*으로 기관 업무의 인권 현황 점검

* 외국인·이주민 선원의 인권침해 취약부문 발굴·대처 노력(해수부) 등

- 기관내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주요 사업목적에 '인권보호·향상'을 추가하는 등 인권 인식확대* 노력

* 정보접근성 향상 정책에 장애인·노인의 접근권을 기본적 권리로 포함(과기정통부), 군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 정기적 실시(국방부) 등

□ 주요 인권 의제에 대한 관심 확대

- 이행의무가 없는 '의견표명'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수용*

* 외국인보호시설의 외부 교통권 보장 수용(법무부), 군부대 피해와 발생 공상 재심사 수용(국방부) 등

- 문화권 등 주요 인권주제에 대한 보완 과제 발굴 및 국가인권 기본계획 반영*·추진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문화권 보장 노력 부각(문체부) 등

※ 인권 개선 노력 우수사례(농진청)

- 농가 경영개선 사업,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 기관 사업에 성평등 인식 확산·실현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분석 적극실시·홍보

문 제 점

- 소관 업무에서 인권관련 보완과제 발굴 노력 부족
 - 수사·고용 등 특정 영역에만 인권침해가 존재한다는 인식으로, 그 외의 업무영역에서는 인권관련 개선과제 발굴에 낮은 관심*
 - * 반부패 교육 외에 다양한 인권분야에 대한 관심 미흡 등

- 기관 내 주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대처 미흡
 - 성희롱 등 기관 내외 반복 제기되는 인권침해 해결 요구에 대해, 구체적 직무교육·제도 개선 등의 적극적 대응 부족*
 - * 기관 구성원 간 갑질·성희롱에 대해 의무교육 외에 대처 실적 부족, 행정집행 과정에서 반복된 인권침해 문제 제기에 대한 대처 미흡 등

개선·보완 방향

- 기관 업무에서 인권관련 개선사안의 발굴·점검 노력 제고
 - 소관 사업의 개인 권리보호 인식 검토, 취약계층 접근성 점검 등 넓은 시각에서 인권관련 개선과제의 적극적 발굴 노력 필요

- 인권존중 문화 조성 및 제도 개선 필요
 - 인권침해·차별의 예방을 위해 기관 내 인권 사각지대 점검·관리, 인권교육 구체화·내실화 등 적극적인 노력 필요

4 특정시책

가. 평가 개요

- (평가목적) 정부기관의 국가배려시책 등에 대한 객관적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각 기관의 준수율 제고
- (평가대상)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
- (평가방법) 법정 기준*을 중심으로 부처별 실적 정량적·객관적 평가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평가지표 (±2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장애인 고용(고용부)	· 법정 의무 고용률(3.2%) 기준 가감점	±0.6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복지부)	· 법정 의무 구매비율(1%) 기준 가감점	±0.6
중소기업 제품 구매(중기부)	· 법정 의무 구매비율(50%) 기준 가감점	±0.6
기술개발 제품 구매(중기부)	· 법정 의무 구매비율(10%) 기준 가감점	±0.2

나. 평가 등급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순으로 표기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보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미흡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소방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다. 총 평

□ 주요 성과

- (장애인 고용) 전년대비 상향된 '17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3.0%→3.2%)을 초과하여, 장애인 고용률 상승*

* 장애인 고용률 : ('15) 3.36% → ('16) 3.82% → ('17) 3.83%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전체기관의 총 우선 구매액 및 평균 구매율*이 전년대비 상승하고, 법정기준 달성 기관수도 증가**

* 총 우선구매액(평균 구매율) : ('16) 846억원(1.34%) → ('17) 883억원(1.49%)

** 법정기준 달성기관 : ('16) 31개(72.1%) → ('17) 32개(74.4%)

- (중소기업·기술개발 제품구매) 중소기업제품 평균 구매율*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기술개발제품의 평균 구매율**도 전년대비 증가

* 중소기업제품 평균 구매율 : ('16) 66.5% → ('17) 71.2%

** 기술개발제품 평균 구매율 : ('16) 13.4% → ('17) 16.8%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의 경우, 전체 기관의 구매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준 미달성 기관도 일부 존재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법정 1%) : 11개 기관 미달 (25.6%)

** 기술개발제품 구매(법정 10%) : 10개 기관 미달 (23.3%)

⇒ 공공기관의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복지부) 및 기술개발 제품 전담기관 지정 확대(중기부) 등을 통한 구매율 제고 노력 필요

4. 분야별 평가결과

(1) 장애인 고용 (법정 고용률 3.2% 이상)

주요 정책성과

- '17년 장애인 의무고용률(3.2%)을 초과하여, 장애인 고용률 상승*

* 장애인 고용률 : ('15) 3.36% → ('16) 3.82% → ('17) 3.83%

- 장애인 고용률 상위 기관(4%이상) : 새만금개발청(5.51%), 조달청(5.40%), 법무부(5.21%), 보훈처(5.20%) 등 13개 기관

※ 실적개선기관 : 국세청(전년대비 1.57%p ↑), 법제처(전년대비 0.71%p ↑)

문제점

- 의무 고용률 미달기관*이 일부 존재하고, 중증 장애인 고용비율**은 전체 장애인 대비 낮은 수준

* 교육부(2.06%), 국방부(2.67%), 방사청(2.48%), 행복청(2.70%) 등 8개 기관

** 고용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비율은 15.96%(775명 / 4,855명)

개선·보완 방향

- 국세청 등 실적개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기관별 직무분석,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 자격요건 완화, 고용환경 개선 등 채용 확대방안 강구(고용부)

○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무 발굴 등 고용 확대 노력 강화

(2)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법정구매비율 1% 이상)

주요 정책성과

- 대상기관의 총 우선구매액 및 평균 우선구매율* 모두 전년대비 상승하고, 법정기준 달성 기관수도 증가**

* 총 우선구매액(평균 구매율) : ('16) 846억원(1.34%) → ('17) 883억원(1.49%)

** 법정비율 달성기관 : ('16) 31개(72.1%) → ('17) 32개(74.4%)

- 법정구매율 초과기관 : 새만금청(6.72%), 여가부(3.57%) 등 32개

- ※ 실적개선기관 : 교육부(0.97→1.20%), 국방부(0.91→1.13%), 고용노동부(0.93→1.80%) 등 6개 기관*

- * 법정비율 미달('16년)에서 초과('17년)로 전환

문제점

- 법정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기관*이 상당수 존재하고, 일부 기관은 전년 대비 실적 감소**

- * 평가대상 43개 기관 중 11개 기관 미달성 (25.6%)

- ** 법제처(△1.52%), 원자력위원회(△0.96%) 등 21개 기관 실적 감소

개선·보완 방향

-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구매물품 및 서비스 품목 다변화 등 구매율 제고 노력 지속(복지부)

-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공개 등 제도개선 추진(복지부, 관련 개정안 복지위 의결, '17.12월)

[3] 중소기업 제품 구매 [법정 구매비율 50% 이상]

주요 정책성과

□ 중소기업 제품의 평균 구매율(71.2%)이 법정비율(50%)을 크게 상회하고, 대부분 기관이 구매율 목표치*를 달성

○ 총 43개 기관 중 39개 기관(90.7%)이 법정비율 달성

※ 외교부 등 2개 기관은 기관 특성상 사전 협의된 별도 목표비율 달성

○ 일부 부처*는 기관 성과지표 반영, 정기 점검, 영상회의 등 구매 관리를 통해 높은 구매율 달성

* 농진청(91.8%), 행복청(91.5%) 등 6개 기관이 85%이상 달성

- (농진청) 매년초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 본청·소속기관의 실적을 매월 점검하여 부진 기관 관리, 담당자 화상 업무연찬 회의 등을 통한 높은 구매율(91.8%) 달성
- (행복청) 부서평가 반영을 통한 중기제품 구매율 제고, 공사 발주 증가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상승(91.5%)

문 제 점

□ 정부기관의 평균 구매율은 법정비율을 상회하고 있지만, 공공기관(775개) 평균 구매율(73.7%)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수준

개선·보완 방향

□ 구매목표 및 실적 공개 등 적극적 제도 운영*, 공공구매제도 상시 모니터링, 구매실적 수시 관리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구매율 제고(중기부)

* 중기제품 구매목표 및 제도 위반내역 국회보고 등 제도 운영

(4) 기술개발제품 구매 (법정 구매비율 10% 이상)

주요 정책성과

- 기술개발 제품의 평균 구매율(16.8%)이 법정비율(10%)을 상회하고, 법정 구매율 초과기관 수도 증가 (31개 → 33개)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구매율) : ('16) 5,470억원(13.4%) → ('17) 6,686억원(16.8%)

- 적극적 성과관리를 한 기관들의 경우 높은 실적 달성*

- 주기적으로 기술개발제품을 소속 및 산하기관에 안내, 기관의 구매 목표비율 설정, 구매 교육 등 실시

* 교육부(40.8%), 조달청(38.1%), 문화재청(37.4%) 등 12개 기관이 20% 이상 실적치 달성

- (교육부) 인증신제품(NEP)을 산하기관에 안내하고, 구매 품목 중 인증 신제품이 있는 경우 20% 이상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회계담당자 연수 등의 노력을 통해 40.8% 실적 달성
- (국세청) 소속기관에 매월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제품 등 법정의무구매 제도 교육 강화, 매월 실적 취합을 통한 실적 관리 등 적극적 성과관리를 통해 33.76% 실적 달성

문제점

- 평균 구매율은 상승(13.4%→16.8%) 했으나, 법정구매율 미 충족(10개) 및 전년 대비 실적 감소 기관(20개) 다수 존재

개선·보완 방향

- 기술개발제품 전담기관 지정 확대를 통한 구매 활성화 추진 등을 통해 구매율 제고(중기부)

Ⅲ. 기관별 종합 평가

III. 기관별 종합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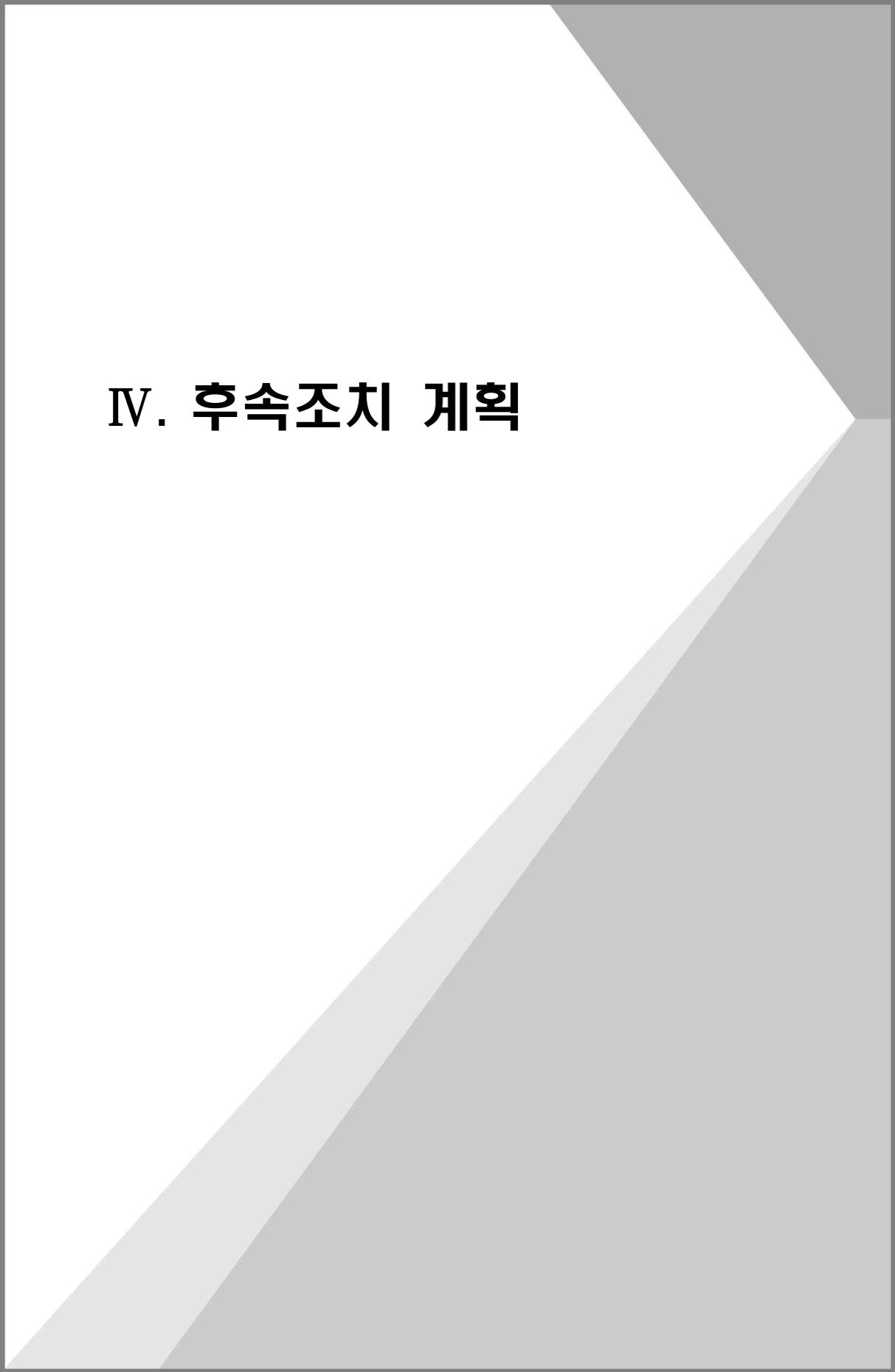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정책소통, 국민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관별로 합산·발표하여 기관 차원의 국정성과 제고 독려
- (평가방법) 국정과제(50점), 일자리 창출(20점), 규제개혁(10점), 정책소통(10점), 국민만족도(10점) 점수를 합산
 - 현안관리(±3점), 갈등관리(±3점), 인권개선(±2점), 특정시책(±2점)은 가감점으로 반영

2 평가 등급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순으로 표기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
보통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병무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미흡	통일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소방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IV. 후속조치 계획

IV. 후속조치 계획

① 평가결과 환류 및 개선조치

-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정책소통 등 평가부문의 개선 필요사항을 각 부처에 통보, 개선계획 수립토록 조치

- 평가주관기관에서 이행상황 점검

- 이행상황 점검결과는 '18년 평가시 반영

②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포상금 지급
-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대한 훈·포장 수여

